

■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복지·보건·의료 미래 비전은

통합특별법시 ‘기본사회·지역완결 의료’로 삶의 질 대전환

기본소득 기반 안전망·24시간 응급 필수의료체계 구축 AI포용복지·60분 생활권 등 장벽없는 스마트도시 구현

광주시와 전남도가 하나로 뭉치는 통합 지치단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본사회 실현과 포용적 복지혁신’에 방점이 찍혀 있다.

통합특별시는 단순히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기본사회 실현과 지역완결형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핵심 축으로 시민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26일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 건강타운에서 ‘광주전남 통합 복지·보건·의료분야 미래 비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선미 광주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은 통합특별법의 복지·보건 비전은 ‘기본사회 실현과 포용적 복지혁신’으로, 시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와 지방 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미래형 복지모델을

구현하고, 지역에서 필수 의료와 연결되는 보건으로 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본사회 실현 특례’, ‘저출생대응기금 설치 특례’, ‘통합특별시 돌봄특구 지정’, ‘인공지능 약자 보호’ 조항이 담겼다. 이들 바탕으로 기본소득 기반 활력 도시, 빈틈없는 돌봄 공동체, 장벽 없는 스마트도시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통합특별시는 전 생애 국가책임 돌봄을 강화하고, 24시간 응급 필수 의료안전망을 구축해 ‘응급실 뱅뱅이 제로’에 도전한다.

지역 내에서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 의료 해결되는 지역완결 의료망을 확립하고, 지역 의사 양성과 공공의료재단 설립, 지방의료원 국가운영경비 우선 지원 등을



강기정 광주시장이 26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 복지·보건·의료분야 미래 비전 설명회’에 참석해 기본사회 실현 특례, 저출생대응기금설치 특례 등이 담긴 통합특별법에 대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눈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통해 의료격차 해소에 나선다.

아울러 각종 기본소득 기반 수단체계를 확립해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이동·소통의 장벽

을 낮추는 기술복지 모델을 도입한다. 교통약자와 교통약자, 정보취약계층이 일에서 제갈할 수 있는 스마트 복지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노인복지와 의료체계, 광주·전남 간 광역교통망 확충, 기업 유치와 산업·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광주시는 ‘불이익배제 금지’ 원칙 아래 도·농간 생활권과 접근성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체계를 유지·확대하고, 국가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 체계 구축 계획을 설명했다.

또 광역철도·광역BRT 확충, 대중교통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60분 광역생활권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와 청년인구 유입과 관련, 인공지능·미래차 등 첨단산업 연구·실증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확장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전남의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차원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는 선택”이라며 “통합을 통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초광역 산업 중심 도시를 만들고, ‘인(In)서울’이 아닌 ‘인(In)광주, 인(In)전남’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정진욱 “지방정부 벤처투자 쉬워진다”

지역·민간 벤처투자 선순환 구축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주 동남갑·사진)은 25일 지방정부의 벤처투자에 대한 투자를 더 쉽게 하고 공공 투자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설치한 경우에만 가능했던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펀드 출자를 기금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폭넓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벤처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추고, 지역 주도의 투자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또 벤처투자회사가 100% 출자한 투자조합운영전문회사 설립에 벤처투자조합을 결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기획사(엑셀러레이터)의 의무투자 대상을 업력 5년 이내 기업과 후속·국의 창업기업까지 확대했다.



초기 투자 이후 성장 단계에서 자금이 막히는 문제를 해소하고, 유망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정진욱 의원은 “현행 제도는 벤처투자 회사가 조합을 직접 운영하는 단일 구조에 머물러 전문성 강화와 책임 분리에 한계가 있었다”며 “아울러 초기 투자 이후 성장 단계에서 자금이 단절되는 구조 역시 개선이 필요했다”고 언급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김철우·장세일 민주 예비심사 ‘통과’

내달 2일부터 기초단체장 등 후보자 면접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지역 예비후보자에 대한 정밀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계속심사 대상에 올랐던 김철우 보성군수와 장세일 영광군수가 최종 ‘적격’ 판정을 받았다.



앞서 전남도당은 지난 4월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전남지역 지방선거 입지자 가운데 551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고, 102명은 계속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김철우 군수 대상에는 김철우 군수와 장세일 일 군수, 김한중 장성군수 등이 포함됐다. 김한중 군수는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했고, 중앙당은 이를 받아들여 적격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신정훈, 딥페이크 비방 영상 유포자 고소

“끝까지 책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밝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사진)은 26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과 악의적 비방 게시물을 SNS에 게시·유포한 페이스북 이용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영상들은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가상의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표시 없이 유포됐으며, ‘전과 6범’.



‘고양이에게 생선 말기 는 꼴’ 등 표현을 사용해 후보자의 인격을 조롱·비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비방성 선거운동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며, 딥페이크를 사용 시에도 유권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AI를 악용한 허위·조작 선거 영상은 최대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신정훈 의원은 “상대 후보에 대한 지지 분한 네거티브 공세보다는 전남광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을 둘러싼 정책·비전 경쟁에 집중하겠다”며 “딥페이크와 후보자비방에 기대는 구태 정치에 단호한 심판을 내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성오 기자

6·3 지방선거 브리핑

최영열, 영암군수 출마 선언 ‘영암 르네상스’ 4대 핵심 전략 구상

더불어민주당 최영열 전 전남도청 종합민원실장(사진)이 6·3 지방선거 영암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전 실장은 지난 25일 영암농협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암의 아들로 태어나 한 번도 고향을 떠나지 않고 군민과 호흡해 온 진짜 영암 사람”이라며 “정체된 영암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출마표를 던졌다.

그는 ‘영암 르네상스’를 위한 4대 핵심 전략을 내놨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유한 영암’, ‘글로벌 영암’, ‘따뜻한 영암’, ‘소통하는 영암’ 등이다. ICT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부농시대 실현, 월출산 스카이 전망대 및 기차 모노레일 구축, 전국 최초 어르신 물리치료 무료 쿠폰제 등 10개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최 전 실장은 “농협, 전남도, 국회를 모두 경험한 준비된 해결사”라며 “전남도청 종합민원실장 재임 시절 민원서비스 만족도 전국 1위를 2년 연속 달성한 역량과 박준영 국회의원 정무수석 보좌관으로 쌓은 인맥 및 예산 확보 노하우를 영암 발전을 위해 쏟아부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민 앞에 겸손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진솔하게 답하는 군민 중심 행정을 실천하겠다. 군민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군수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김영남 서구청장 예비후보 1호 공약은 ‘민생경제 활력’

김영남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사진)가 ‘골목상권 집중 회복’과 ‘양동시장 대전환’을 1호 공약으로 내놨다. 김 예비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침체된 서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원금만 늘리는 보어주거식 행정이 아닌 매출과 방문객 증가로 결과를 증명하는 책임형 민생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골목상권 집중 회복’과 ‘양동시장 대전환’을 제시했다. 우선 김 예비후보는 서구 상권을 대상으로 카드 매출, 유동인구, 업종 변화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회복 가능성 높은 상권 30곳을 선정, 행정과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상권별 정밀 진단, 환경개선 패키지 지원, 브랜드 및 통합 마케팅 추진, 디지털 판로 확대 등을 추진, 1년 단위 성과를 공개해 주민 평가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또 그는 양동시장을 ‘미시 목적지형 전통시장’으로 키워 나간다. 화재예방, 전기설비 교체 등 안전 인프라 전면 개선은 물론 온라인 판로 통합 지원, 청년 푸드창업 공간 조성, 음식축제·야시장·테마형 미시행사 정례회로 양동시장을 대 전환하겠다는 생각이다.

김 예비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사업과 상권 르네상스 2.0 등 정부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 해당 사업의 성공으로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정달성 북구청장 예비후보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정달성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사진)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완성을 위한 자치구의 자치성 전환과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주장하며 지선 후보들의 공동대응을 제언했다.

정 예비후보는 2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자치구들의 자치성 전환과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전남 22개 시·군은 평균 인구가 8만 명 수준임에도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으로 시 단위는 4000억원, 군 단위는 2800억원을 지원받았다”며 “반면 광주 5개 자치구는 평균 인구가 27만명임에도 시를 통해 조정교부금만 866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행정수요가 더 많은데 재정은 훨씬 적은 구조로, 이 격차가 통합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예비후보는 “특별법에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명문화하고, 광주 5개 자치구를 시급 규모로 전환하는 논의를 공식 의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통합시장 출마예정자와 광주 5개 구정장, 구의원 등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에게도 초당적 공동 대응을 제언했다.

정달성 예비후보는 “지금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법적 근거”라며 “광역과 기초, 국회와 지방정부 모두가 책임 있는 결단과 공동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박수기 광주시의원 광산구청장 출마 공식 선언

박수기 광주시의회의원(사진)이 6·3 지방선거 광산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2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미를 주주로 모시고 행정의 성과를 배당하는 ‘주식회사 광산구’의 유능한 CEO가 되겠다”며 출마표를 던졌다.

그는 “지방소멸의 경고음이 광산구 곳곳에서 들리고 있는데 행정은 여전히 낡은 관성 속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는 발상의 전환과 신적 자치행정으로 구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핵심 비전으로 ‘주식회사 광산구’라는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구민을 주주로, 구정장을 CEO로 설정하고, 구정의 성과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주민 주권자 중심 경영’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4대 핵심 공약도 함께 내놨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미래차 자동차 국가산업단지 중심으로 기아자동차급 엔지니어링 유치, 소부장 특화단지 이전을 활용한 대기업 유치 등이 대표적이다.

교통 분야로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부지에 종합버스터미널 이전을 연계한 대규모 환승터미널 조성, 교육분야는 공공 돌봄 인프라 대폭 확충 등이 있다.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